

제329회국회
(정기회) 남북관계및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14년9월15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220호)

의사일정

1. 전문가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전문가 의견 청취의 건 1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원혜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남북관계및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제326회 1차 회의를 연 이후에 7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 공청회를 열어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그간의 국회의 역할에 대한 진단과 과제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8월 29일 제3차 회의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 업무보고 및 인천아시안게임 관련 통일부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정기회가 시작된 이후 첫 회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회의 이후 제4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선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청취의 기회를 다양하게 많이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오늘 회의에서는 남북 평화공존과 경제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 전문가 의견 청취의 건

(14시09분)

○위원장 원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문가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의는 아주 특별하게도 우리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도 의견을, 꼭 특위 위원의 질의가 아니더라도 좋은 의견을 내 주시면 그런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견을 발표해 주실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신기욱 교수입니다.

다음으로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부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스트라우브 부소장님은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

과장·일본과장, 정치과장을 역임한 바 있고 한국어에 능통한 것은 물론 한국에 정통한 식견을 갖고 계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가 지난 1년간의 연구 끝에 내놓은 대북정책보고서 ‘맞춤형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를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발제를 위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 주신 두 분 전문가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맞춤형 인게이지먼트 보고서는 오늘 우리 남북 특위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정책 제안서로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남북협력관계를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로드맵이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 가운데 한국이 더 이상 주변 강대국 사이에 끼인 새우가 아닌 돌고래임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을 보면서 우리의 역량을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관계 진전에 대한 고견을 발표해 주시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 특별히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욱 소장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 시간은 30분으로 정했습니다. 가급적 맞춰 주시고 부득이하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신기욱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분들께서 바쁘신데 오셔서 오늘 세미나 할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한국에서 나서 자랐는데 제가 미국에 간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도 잘 못 하고 한국말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고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리포트를 만들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회의를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발제문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맞춤형 대북 인게이지먼트와 또 이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게이지먼트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에서는 이 용어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인게이지먼트가 필요한 것인가 또 왜 한국에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지금 시급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도 하게 됩니다.

여기 발제문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지금 핵하고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불신도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섰지만 저희가 볼 때는 아직은 좀 불안정한 측면이 많은 것 같고 또 아시는 대로 남북관계 역시 상당한 냉각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국과 일본 간에도 과거사 문제로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 한반도의 외교안보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 관련국들은 당분간 대북정책을 전환할 의지가 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아시는 대로 전략적 인내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정책이 최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아마도 당분간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선생님께서 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부에서는, 물론 정부의 입장은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비핵화보다는 일단 컨테인먼트(containment)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헤커 박사의 경우, 저희랑 동료 교수인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No more bomb, No better bomb, No proliferation’ 해서 ‘3 Nos’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핵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미·중 관계 측면에서 볼 때도 남한 주도로 통일된 한반도보다는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 문제 해결에 올인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지금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적 인내 정책은 한국에 유리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이고 중국과 일본 간의 전략적·군사적 경쟁도 심화될 것이고 또 미국·중국·러시아 간의 전략적 불신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굉장히 심화되고 자칫하면 북한이 중국의 경제권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단둥에 가 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북경을 보고 있으면 유엔 제재 동참도 하고 또 굉장히 좀 북한을 비판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리지만 막상 동북3성이라든가 이런 데 가 보면 북·중 간의 교류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잘못하면 북한이 어쩌면 불가피하게 중국의 경제권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시는 대로 남한 일부에서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도입하거나 아예 핵을 개발하자는 그러한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도 중국에 대해서 많이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요, 그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핵 문제 진전 없이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측면에서는 아마 북한도 남한과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제는 한국이 좀 더 주도적으로 대북 문제를 이끌어 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울 때 대개 한국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밖에서 볼 때는 한국이 이제 더 이상 새우가 아니고 최소한 돌고래는 됐다, 그래서 고래보다 사이즈는 작지만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스스로 과소평

가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북 문제도 상당히 한국이 리더십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또 상당 부분 국제사회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발제문에 쓴 대로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하고 수교를 했는데 잘 아시는 대로 닉슨은 굉장히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어떻게 보면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북 문제를 더욱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제시하는 기본개념이 맞춤형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라고, 저희가 사실 새로 만든 용어인데요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인게이지먼트’ 하면 대개 포용정책 또 대북 유화정책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북정책에 어떤 포용정책을 펴면서 이것을 영어로 인게이지먼트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인게이지먼트는 포용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유화정책으로 번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만약에 유화정책을 이야기한다면 인게이지먼트가 아니고 오히려 어피즈먼트(Appeasement)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군에서 보통 교전규칙을 얘기할 때 그것을 룰스 오브 인게이지먼트(Rules of Engagem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게이지라고 하는 것은 상대하고 계속 관여를 하고 접촉을 하고 이러한 것이 인게이지먼트지 꼭 포용을 하고 유화정책을 펴는 것이 인게이지먼트는 아닌데 한국에서는 아마 번역이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인게이지먼트를 번역을 안 하고 영어 그대로 인게이지먼트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번역을 잘못하면 오히려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일러드 인게이지먼트(Tailored Engagement)라고 하는데, 맞춤형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과거 부시 행정부에서 한동안 맞춤형 봉쇄정책 이런 것을 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드 컨테인먼트(Tailored Containment)라고 한 적이 있고 또 국제학 쪽에서는 테일러드 디터런스(Tailored Deterrenc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맞춤형 인게이지먼트라는 것은 당장에 직면할 위험요소들을 줄이면서 정치·외교·안보 상황에 맞는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서 안보상황을 개선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가는 선순환 전략,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김대중 정부 시절의 소위 햇볕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이명박 정부 시절의 '비핵·개방·3000'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대부분의 남북 교류협력의 전제조건을 비핵화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는 대개 외교안보와 남북 교류협력을 좀 분리했던 그러한 시각이 있었는데 저희는 분리하거나 어떤 전제조건으로 하기보다는 주어진 외교안보 상황에 맞게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또 그러한 교류협력을 통해서 안보상황을 개선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 전략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3페이지에서 주요 관련국 정세를 조금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대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특히 통일대박론이라든가 드레스덴선언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고요. 오바마 정부의 경우에도 남한 정부의 인게이지먼트나 대북원조가 어떤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박근혜정부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일부에서는 미국에서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시각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중관계와 한미관계가 제로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한일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한일관계가 사상 최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한미일 공조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한국 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언론을 보면, 지난 1년 정

도를 보면 중국이 상당히 변했다, 이제 더 이상 중국의 대북정책이 과거와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김정은이 아직 방북을 안 했던 것 그다음에 또 지금 많은 소위 중국 내 관변학자들이 북한에 대한 정책 변화를 주문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중국도 이제는 북한에 대한 정책이 변했다 하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분명히 중국이 남한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핵 문제보다는 한반도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위험을 감내하면서까지 북핵 문제 해결이라든가 정치 개혁을 위해 북한을 압박할 이유나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아직도 절대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꼭 한반도의 비핵화 얘기를 하지, 한 번도 중국의 수뇌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꼬집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꼭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활동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관계가 상당히 냉각되고 단절되면서 과거에 남북 간에 있었던 어떤 경제협력이 다 중국으로 넘어간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하고 러시아는 일단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개선할 방향은 없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 여야 위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다소 민감할 수 있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저희들의 평가, 그런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박근혜정부가 주창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상당히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임 정부와 달리 인도주의적 지원 등 일정 부분은 핵문제하고 연계 없이 진행해서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겠다는 원칙은 굉장히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역시 그러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대박론을 주창해서 통일에 대해 커져가는 어떤 회의론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려고 했던 점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뢰외교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의 지지를 얻은 것도 상당한 공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없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방향 설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계획보다는 레터릭(rhetoric)이 굉장히 강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북핵 문제와 연계하지 않겠다는 비정치적 교류협력 분야에서조차도 큰 진전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아직까지는 전임 정부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24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의 입장이 좀 모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하고 통일대박론 간에 어떤 논리적·정책적 연결고리가 좀 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국제사회의 많은 공감을 얻었지만 앞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대북정책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하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는 통일 문제와 북핵 문제 그다음에 인권 문제하고 대북 제재, 네 가지 요소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통일과 관계돼 가지고는, 통일 한국은 대통령 말씀대로 대박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통일 대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 상태에서는 통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통일기반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하면 현시점에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위축될 수가 있고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마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한국이 만약에 통일에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는 것

도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만 현 상황에서 통일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중국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미래에 통일을 원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남북통일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긴 하지만 우선 현시점에서는 긴장 완화, 화해 협력, 사회·경제·문화 등의 단계별 목표 중심의 대북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역시 북한 핵문제인데요, 아마 이 북핵 문제를 갖고 국내에서도 보수·진보 간에 많은 견해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 핵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비핵화는 여전히 남한 대북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또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한 정권만 강화시키는 사업들은 피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인권 문제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 2월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최종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스트라우브 선생님이 다 말씀을 하겠지만 아마 이 인권 문제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제가 볼 때는 아마 한국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인권문제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 인권문제를 너무 강조하면 북한주민 생활 개선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국제사회가 앞장서고 있는 인권문제를 한국정부가 방관한다면 이것은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문제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제사회나 국제기구들이 전반적인 리드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내주고 또 협조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인권 관련 국제기구들을

활용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또 남쪽이 인권문제를 대북 무기로 사용한다는 북한의 어떤 비난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가 대북제재 문제인데요.

사실 지금 유엔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대북제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제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데 이거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유엔 제재처럼 여러 국가가 합의한 안을 수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5·24조치로 대표되는 한국정부의 대북 제재가 과연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현재의 대북제재는 북한 정권과 권력층에 대해서는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일반 주민들에게만 피해가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남북관계도 대북제재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특히 5·24조치는 북한보다는 남한 기업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고 또 분명히 중국 기업이 많은 반사이익을 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작년에 단둥에 가서 보고 그러한 점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24조치라는 것이 천안함, 연평도 이러한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면 해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저희도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택적인 완화를 취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유익하고 아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맞춤형 인게이지먼트 기반을 위한 3단계 안하고 네 가지 원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한국적 페리 프로세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저희 동료이기도 한데 클린턴 정부 시절에, 90년대 말에 대북조정관을 맡아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조정하고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혼란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조직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일부라는 대북정책

주무부처도 있고 또 대통령이 의장인 민주평통도 있고 또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있고 국가안보실도 있고 또 최근에는 통일준비위원회까지 있어 가지고 이런 여러 부처들이 과연 협조를 잘 하면서 효율성 있게 대북정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사실 워낙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신임하에 여야 정치권의 존경을 받고 전문성과 책임감이 있는 인물로 해서 대북정책을 전담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클린턴 당시에 윌리엄 페리 장관을 대북조정관으로 임명했을 때 이분이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워싱턴에 있는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또 한국과 일본과의 공조를 취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적 페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받고 또 여야 정치권의 의견도 모으고 또 국제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대북정책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볼 때는 한국에서는 국제적인 지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볼 때는 국제적인 지지에 앞서서 내부의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가 볼 때는 미국이나 중국도 상당 부분은 아마 한국의 리드를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냥 외국의 지지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국민적 합의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대한민국이 민주사회고 사실 극좌도 있을 수 있고 또 극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가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분의 2에서 4분의 3 정도의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 한국이 비핵화 문제를 제외하지 않는 한 한국의 대북정책을 대체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 문제 등은 남북관계의 특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존중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남북 경제 교류·협력이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점은 우려를 하기 때문에 주변국하고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남북한 교류 협력을 지지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인게이지먼트의 원칙과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4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심벌리즘과 민족적 정서에 호소하기 보다는 상호 이해(利害)에 기반한 실리주의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정부 시절만 해도 상당히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는 초기였기 때문에 어떤 민족적 정서라든가 또 심벌리즘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어떤 상호 이해와 실리주의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시장원리와 국제적 기준 적용이 중요하다, 제가 오늘 시간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책에서 자세히 썼지만 이제는 가급적이면 개성공단이라든가 또 금강산을 재개할 경우에도 시장원리를 적용하고 또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 이제는 정부에서 특히 현금 같은 거를 지원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켓 원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정부는 민간 차원의 협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인게이지먼트를 위한 로드맵을 보면 우선 인도주의적 분야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도 수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건이라든가 영양 결핍, 전염병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통일 이후에도 한국에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단지 북한을 돕는 것을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단계는 교육이라든가 문화 교류인데요. 박 대통령께서 언급한 대로 비정치적인 분야로서 상당 부분 비핵화와 연계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두 분야의 교류 협력은 남북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기업이나 비정부단체들의 역할, 공간을 만들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데에 진전이 있으면 그다음 단계로 경제협력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 분야는 북핵 문제와도 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핵화협상 등에서 북한이 변화가 없으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변화가 좀 있으면 남한은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서 대북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개발·협력은 규모도 굉장히 크고 비핵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 협력의 후반부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라서 협력의 범위와 깊이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차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서 정치·안보 상황을 개선시키고 또 개선된 환경에 따라서 교류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소위 맞춤형 인게이지먼트의 기본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보고서의 후반부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야별로 과연 어떻게 하면 이 4원칙을 적용해서 할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갔고 또 위원님들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 발제를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 발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혜영 신기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발표하신 내용이 이 책 ‘테일러드 인게이지먼트(tailored engagement)’입니다. 120페이지 분량의 영문 책자인데 워낙 작은 활자로 돼 있어서 대중용 책으로 내면 한 300여 페이지, 400페이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는 드렸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께는 수량이 부족해서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기욱 교수님이 이 연구는 이 영문 책자를 발간한 거로 끝났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러지 말고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있게 한국어로 출판까지 하는 데 좀 수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되면 한국어판 그리고 훨씬 큰 글자로 읽기 좋은 책을 다시 모든 의원님들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 교수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원래는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부소장님의 의견 청취도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신 교수님? 지금……

○진술인 신기욱 (옆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를 보며)

한 말씀 하시지요. 조금만 부연설명 해 주시지요.

○위원장 원혜영 한국말이 아주 익숙지는 않기 때문에 장시간 발제를 하시는 거는 어렵고 좀 가볍게 언급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주시는 정도로 하고 이따 질의응답 때 기회를 많이 가지면 어떨까요?

○진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그러면 짧게, 오늘 여러분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반갑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30년 미국정부에 있었지만 미국정부를 떠난 지가 벌써 8년이나 됐고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정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술인 신기욱 지금 민간인입니다.

○진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사 먼저 기다리고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그러면 따로 진술의 시간은 안 갖도록 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의견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진술인의 의견 발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의 위원이 아니신 의원님들도 본 특위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적절하게 관심 있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심윤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조 위원 신기욱 교수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교수님, 오늘 이렇게 아주 정말 유익한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 교수님 또 스트라우브 부소장님하고는 평소에도 커뮤니케이션을 필요한 만큼 했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질의응답이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또 자리가 자리인 만큼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일러드 인게이지먼트라는 내용을 오늘 신 교수님 말씀을 죽 들으니까 지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영어로 하면 트러스트 빌딩 프로세스(trust-building process)라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코리안 페닌슐라 트러스트 빌딩 프로세스(Korean Peninsula trust-building process)인데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지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개념에 대해서 물론 우리 정부나 학계에서도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세스에 대한 의미라든지 또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면 테일러드 인게이지먼트에서도 ‘단계적인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우선 위험 요소를 줄이고 그리고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하고 그리고 안보 상황을 개선하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가는 것이다, 그러한 선순환 전략이다 하는 것은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상당히 일치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나중에 나오는 로드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더 드는데 지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보면 먼저 인도적인 지원과 교류 협력을, 그러니까 상호 호혜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서, 그래서 신뢰를 구축하고 신뢰가 구축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북

핵 문제도 실질적인 어떤 진전이 있을 경우에 보다 더 큰 규모의 경제협력으로 가고 그 가운데에서 물론 문화적인 교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은 통일, 즉 경제적 통합을 이루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큰 규모의 통일, 즉 정치적 통일을 이룬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테일러드 인게이지먼트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상당히 다른 의미의 같은 내용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의 이러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테일러드 인게이지먼트를 제창하셨을 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중에서 무엇을 가장 보완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신기욱 심 위원님께서 굉장히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하고 제가 주장하는 맞춤형 인게이지먼트가 기본 취지는 굉장히,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신뢰’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신뢰보다는 ‘실리주의’ 이런 얘기를 쓴 이유는 뭔가 하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과연 북한하고 얼마만큼의 신뢰 구축이 가능하냐, 또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과연 꼭 신뢰가 있어야 외교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신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실리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맺어 가는 거를 강조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상당히 맞는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레토릭한 측면이 강하고 저희도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굉장히 약하고 그다음에 인도주의 지원 같은 것도 지금 보면 굉장히 작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임 정부보다 오히려 작은 정도의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저의 의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일부러 신뢰라는 말은 쓰

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실리에 기반하는 것이 신뢰보다는 맞지 않느냐, 제가 구태여 차이를 말한다면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계별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심윤조 위원 신뢰 프로세스에 ‘신뢰’를 넣은 이유 중의 하나는 남북한 간에 7·4공동성명 이후에 많은 합의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지켜지지 못하는 근본에는 서로 신뢰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 부족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작은 신뢰부터 쌓아 가자 하는 차원에서 신뢰 프로세스라는 말을 넣은 것인데요. 그것이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실리주의와도 결국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레토릭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사실 이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통일부장관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신뢰 프로세스를 제대로 가동할 계기를 아직 만들지 못했다, 왜냐하면 정권 출범 초기부터 북한이 그 전에 장거리미사일 쏘고 2월 달에 들어와서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남북한 모두에 있는 외교관들, 외국인들 다 철수하라고 위협하고 이어서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신뢰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행할, 실행할 어떤 계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 저희의 딜레마이거든요. 지금도 그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따가, 질의응답을 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신 교수님께서 무엇을 모멘텀으로 해서 신뢰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는 5·24조치, ‘5·24 제재조치의 전면적 해제’라는 말이 있어서 자세히 봤더니 그것은 아니고 ‘선택적 완화’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이것은 지금 정부 입장하고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5·24조치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얼마든지 적용 안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가령 개성공단의 확장이라든지 러시아와의 협력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국제적 협력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는 우리가 갖고 있다 하

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굳이 전면적 해제라는 말을 안 쓰느냐 하면 신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천안함 피폭에 의해서 제재를 부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이것을 풀다고 했을 때는 소위 맨 처음에 이것을 부과한 명분 자체가 없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 남북관계가 개선돼 가면서 북한이 천안함 피폭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필요하면 사과도 하고 그 이상의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하나의 톨로써 이 5·24 제재조치라는 명분은 걸어두되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완화할 것은 완화하고 있다, 그래서 선택적 완화라는 것이라고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권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방관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모든 내용에 제가 거의 공감하는데 딱 하나 공감하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가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국회가 방관하는 겁니다. 정부는 할 것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인권대사를 임명해서, 인권대사의 업무 중의 99%가 북한 인권문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국제회의 다 다니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신 전문성을 띤 국제 인권 관련 기구에 다 참여해서 북한 인권문제 다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인권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무심하다 내지는 방관하고 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의 입장을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신기욱 잠깐 대답할 시간이 있습니까?

○위원장 원혜영 예.

○진술인 신기욱 신뢰냐 실리냐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지금 개성공단이 폐쇄가 됐다가 다시 재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연 남북 간에 신뢰가 생겨서 다시 재개가 됐느냐 생각하지는 않고요, 결국 개성공단은 남북 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개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24조치가 정말 얼마나 완화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일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 작년에 제가, 자꾸 단동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 가 보니까 과거에 북한하고 무역하던 한국 기업이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그

런데 아직 거의 살아나고 있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역이라든가 교류할 때도 여기 통일부 관계자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상당히 제약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물론 북한이 저리고 있으니까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핵 문제하고 연관 없이 지원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으면 한번 과감하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 보고 그랬을 때 과연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말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 지원한 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신뢰가 있고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남북관계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핵 문제와 상관없이 한번 해 보겠다 그 판단이 서면 제 생각에는 한번 과감하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해 보고 나서 과연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과감하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다음으로 이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희 위원 신기욱,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두 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이나 혹은 우리당의 기본적인 인식과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우선 ‘대북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한반도의 비핵화, 남북의 평화·화해·협력 이것이 동북아시아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남북문제는 남한과 북한에게 있어서 보다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미국, 중국 등 주요 관련국들은 당분간 대북정책을 전환할 의지나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미국이 예를 들면 다른 요소가 있을 겁니다. 중동, 아프리카 소요 문제도 있고요, 최근에는 IS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오바마 행정부가 원래 한반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도 여

기 써 놓으신 대로 대략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발제문에 있는 것처럼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적 내용이라기보다는 주로 레토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진전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 취임 이전에 주장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지금 말하는 통일 대박론 이게 무슨 논리적 연결이 가능한 이야기인지 잘 모릅니다, 국민들도. 저도 물론 잘 모릅니다.

그리고 5·24조치에 대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냥 간다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부분 부분 생각나는 것 있으면 조금씩 바꿔 본다는 것인지, 아니면 해제를 한다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여당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인도적 분야부터 남북교류를 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합니다만 역시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 교류가 우리 남북교류의 핵심이 돼야 한다,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단동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5·24조치는 법적 조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남북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정부가 취한 조치인데 이 조치로 인해서 손해를 본 기업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도 그럴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정부의 정책을 따라하다가 잘못됐는데, 손해를 봤는데 혹은 망했는데 이것을 갖고 정부에 대항해서 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보고 그냥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5·24조치가 해제돼야 함은 물론이고 5·24조치로 인해서 손해를 본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국회가 나서서 일정한 보상을 하고 그 기업들이 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이 당분간 대북정책을 전환할 의지나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략적 인내 정책이 최상은 아니라도 아마 그냥 가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원론적으로는 우리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미 국무부를 포함해서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 이외에 신기욱 소장님이 보실 때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팬찮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목희 위원 예.

○진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즉 20년 전부터 북핵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거의 20년간 미국이 협상해 왔는데 북한은 핵을 카드로 갖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레버리지(leverage), 영향력이 가장 있을 때는 바로 첫 번째 핵실험하기 전이었습니다. 핵실험을 함으로써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더 이상, 레버리지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미국은 원래 북한 정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자기를 적대적으로 보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전술적으로 북한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국민, 미국 지도자는 북한 체제를 싫어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론조사만 봐도 이란 바로 전에 가장 싫어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 하기 전에, 부시 행정부 마지막 1~2년간 진심으로 협상했으면 그때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최대의 여러 가지 양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때 북한 정권이 부시 행정부가 첫 번째 실험을 보고 그렇게 태도를 바꾸었으니 두 번째 실험을 하면 우리가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국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를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과 같이 협상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북한하고 더 이상 협상할 리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결국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리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술인 신기욱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모 일간지에 기고하면서 그 얘기를 썼습니다. ‘미국은 지쳤다. 지쳤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나설 때다’ 이런 얘기를 썼는데, 저희가 작년인가요,

북한 문제 회의를 하면서 과거에 미국의 대북 정책을 맡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왔습니다. 예를 들면 윌리엄 페리, 스티브 보스워스 등 많이 왔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양자도 해 보고 다자도 해 보고 스텝 바이 스텝도 해 보고 캄프리헨시브(comprehensive) 다 해 봤거든요, 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런데 결국은 원위치라는 느낌이 드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상당히, 제 표현인데 ‘약간 지쳤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이 나서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됐을 경우에 과연 미국보다는 한국에 훨씬 더 영향이 많이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국에 있으면 한국에서 의원님들도 계시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도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것 뭔가 미국이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으면 와 가지고 아직도 미국이 뭔가를 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목희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의 생각을 여쭙 본 겁니다.

○진술인 신기욱 그러니까 미국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이 아직도 좀 더 나서야 되고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거꾸로 그것보다는 오히려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이목희 위원 저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북한 정책이 지금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인지 여쭙 본 것이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인이 북한에 3명이 있지 않습니까? CNN인가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고요. 옛날의 미국 같으면 자국민을 어떤 상태든 하여튼 구출하려고 아주 강력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라요. 왜 그런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클린턴 전 대통령과 같이 북한에 가서 미국 기자 2명을 데리고 온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저는 미국 정부에 있지 않았는데 아마 그때

미국 정부에 있던 사람들은 아주 억지로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왜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미국 시민을 인질로 삼아서 미국한테 협박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그때 억지로 클린턴 전 대통령을 보냈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느낌으로서는 그 시점에 미국 정책 만드는 사람들은 아마 더 이상 저런 것을 안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왜냐, 계속 그렇게 북한이 미국 시민을 사실상 인질로 삼아서 저런 요구를 하게 되면 그리고 미국이 거기에 다 응하게 되면 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목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다음으로 양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영 위원 양창영입니다.

신기욱 교수님께 좀 묻겠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내부 분열과 일관성 없는 대북 정책은 북한은 물론이고 관련국들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 모색을 위한 최대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발제문에서 정부하고 민간 차원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의, 오늘 국회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국회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국회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서도 좀 언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 역할에 대해 부족한 점이나 또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등에 대해서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바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신기욱 굉장히 제가 바라던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최대 과제를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언급한 대로 제가 볼 때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0%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한 3분의 2 정도라도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아마 지속 가능하지 않느냐, 안 그러면…… 사실 여기 다 위원님들이 계시서 제가 말씀하기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북한 생각을 잘 모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표로 가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사인을 한 것들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상당 부분이 다 거의 무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객관적으로 볼 때 저희가 북한하고 신뢰 문제를 얘기하지만 거꾸로 그러면 만약에 북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바뀌어 가지고 전임 정부에서 한 것을 만약에 다 어닐(annul)을 하면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이 되겠느냐, 왜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것 상당한 부분을 이렇게 좀 없앴느냐 한 것을 볼 때 결국은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진보·보수 여기에 따라서 대북정책이 너무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국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역할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그것을 입법화하고 리드하는 것이 국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발표한 것도 그냥 밖에서 하기보다는 국회 특위에서 한 것을 굉장히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의 이러한 발제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의를 모아 가지고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그게 사실은 제가 가장 바라고 싶은 어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창영 위원 신 교수님, 남북 관계에 있어서 동북아 등 국제관계를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아태평양연구소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있었습시다만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 어떤 스탠스를 두는 것이 옳고 좋은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연구소에서 오셨으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정책에 비해서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교수님 견해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신기욱 제가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동북아 지역 질서가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아시아나 한반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북아 질서가 변하면서 사실 떠오르는 강자하고 또 좀 쇠퇴하는 강자하고 사이에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1894년~1895년의 청일전쟁 그다음에 10년 후에 러일전쟁 또 똑같은지는 않지만 어쨌든 50년부터 53년 동안에 6·25전쟁이 있었는데, 저도 한국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강자들이 어떤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가운데 싸우면서 그것이 사실은 한반도에서 싸웠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중국이 일본하고 중국에서 싸운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 싸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6·25 때는 사실 거의 한 300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 보면 그게 한반도 인구의 10%가 죽은 것이거든요. 10명 중에 1명이 죽었고 저희 집 안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런 희생자가 다 가족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지금도 제대로 전략을 짜지 않으면 다시 한 번 그런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정부에서 너무 한미 동맹을 강조하다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좀 서먹해져 가지고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중국하고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안중근기념관을 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이 그만큼 원하지 않았는데 중국 애들이 사실 좀 오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시진핑 주석이 서울대 강연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중에 뭔가 하면 ‘우리가 한국하고 중국이 힘을 합해 가지고 일본의 침략을 같이 싸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사실 한반도 침략을 가장 많이 한 게 일본이겠습니까, 중국이겠습니까? 자기들이 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

고 또 지금 동북공정 같은 경우도 수면에 가라앉아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살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저희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국이 영어로 얘기하면 소위 참 어펜시브(charm offensive)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중국이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좀 해 주는 것 같으니까 좋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한일 관계도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일 관계가 나쁘면 저희가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 이게 구도가 미일 대 한중으로 가버리면 이것은 굉장히 한국에 불리한 구도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의 깊게 전략적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분명히 일본과도 제가 볼 때는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사 문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 가는 것은 전략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상당히 가치를 줄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창영 위원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한 것도 미국 아태연구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진솔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북한의 대남정책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나쁜 것이예요. 북한은 언제나 미국이 가장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미국을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북한 정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한민국은 외국도 아니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정치발전, 민주화까지 했으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문보고서에도 쓴 것처럼 북한 정권의 역사, 이념, 체제가 기본적인 문제라고 분명히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사실인데 그런 어려운 사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한반도에 있어서의 상황을 조금 좋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입니다.

○양창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양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 감사합니다.

맞춤형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신 소장님의 지금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적 전반적으로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질의응답 중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인해서 과연 신뢰가 가겠느냐, 이게 북한과 남한의 체제적 차이에서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거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적극적 대화를 하면서 대북정책을 펼쳐 왔을 때 또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강경정책을 펴왔을 때 북한이 변하지 않은 것은 핵개발하는 프로세스는 전혀 변화 없이 진행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 없는 북한을 놓고 정권이 바뀔 때 그 정책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고 봐요. 결국은 과거 정부도 그렇고, 과거에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햇볕정책을 했던 것이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 비핵화 3000 구상이라는 것을 제시한 것도 비핵화를 전제로 했는데 그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속 진행이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 이 정부가 출범을 할 때 과거에 이 두 정책의 전환,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계속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다 그리고 또 국제적 사회에서도 3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에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뒤에도 변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요즘에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과거보다도 평양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것 같다, 전혀 제재를 받는 것 같지가 않다, 특히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금강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5·24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제재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래도 지금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맞춤형 인게이지먼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그런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과거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 좋아졌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진술인 신기욱 한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대북정책 관련된 것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러쿵저러쿵 해도 북한은 계속 핵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인데 아까 말씀드린 해커 박사가 핵 전문가이고 저희야 사회과학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커 박사는 처음 영변에도 갔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라늄 프로그램 할 때도 가서 직접 현장을 시찰한 분인데 그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94년 제네바 협상 때, 그렇지요? 그때 해 가지고 핵 동결을 한창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노력이 없었으면 지금 북한이 핵을 한 10개가 아니라 100개는 가졌을 것이 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는 그러한 측면을 볼 수가 있지만 또 거꾸로 보면 그러한 노력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손해를 본 것이다, 만약에 그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으면 지금 북한이 아마 핵을 한 100개는 갖고 있을 텐데 10개밖에 못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반 컵이 찼느냐, 비었느냐 하는 이런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또 자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나 국제사회도 노력을 안 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5·24조치 문제라든가 북한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북한 갔다 온 분이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평양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장 같은 것이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다 하는데 이제 그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중국 문제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5·24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중국이 비슷한 형태의 협조를 했으면 아마 타격이 컸겠지요. 그런데 한국 기업이 줄어든 것을 중국이 그대로 다 차지했으니까 사실 북한 입장에서 큰 손해를 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왜 한국 언론에서도 자꾸 중국이 변했다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하고 정상회담도 없고 유엔 제재 동참하고 이러한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동북3성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 보면 북·중 간의 교역이 더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아마 결국 5·24조치가 큰 효력이 없다, 정치적으로는 그것을 풀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것 때문에 타격을 입은 것이 북한이 아니고, 오히려 중국은 이득을 봤고 가장 손해 본 것은 한국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일부에서는 ‘북한이 오래 못 간다, 그래서 계속 밀어붙이면 언젠가는 붕괴하지 않겠느냐, 지금 통일대박론도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 정권이 지금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만약에 김정은 체제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이라는 어떤 한…… 글썄요, 나라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여튼 그 체제 자체가 붕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놓고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윌리엄 페리 장관이 페리 프로세스 할 때 마지막 결론지은 게 있습니다.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정하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의 가치라든가 이념에 따라서 북한이 이랬으면 좋겠다, 북한이 좀 불안정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상황에 바탕을 해서 정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체제가 불안정한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당장 무너지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병국 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제시해주신 맞춤형 인게이지먼트를 위한 4원칙, 이 접근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실행을 하려고 하면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하

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제시할 때에는 5·24조치의 해제를 전제로 해서 제시하신 건가요?

○**진술인 신기욱** 말씀드린 대로 전면적인 해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완화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게 없이는 할 수가 없지요.

○**정병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효과 없는 제재 조치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내성을 키우지 않고 그 이후에 더 강한 제재 조치를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효과 없는 제재는 해제하는 것이 옳다 이런 입장이지요.

○**진술인 신기욱**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국회에서 풀어 주시면 안 되는가요, 그런 정치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정병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정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심상정 위원** 심상정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먼 길 와 주신 신기욱 소장님 또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부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을 때, 특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말씀하셨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정부가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남북관계 아니냐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담긴 긍정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오히려 야당이 집권했을 때보다, 박근혜정부가 의지만 갖는다면 더 확고한 남북관계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솔직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의지를 갖는다면, 야당은 기왕에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협력도 가능하겠단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심으로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실제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반 됐는데 과연 박근혜정부 외교에서 뭘 남겼느냐, 뭘 했느냐? 뭐 외국은 많이 다니셨습니다마는, 저는 통렬하게 비판하고 싶어요.

물론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토릭, 레토릭도 아주 자극적인 레토릭을 많이 구사하셨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명박정권 때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또 달라질 조짐이 있는지조차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면 그 프로세스, 지금 우

리 신 소장님 말씀하신 인게이지먼트, 상호 이해 기반한 실리적인 접촉 프로세스를 거쳐야 신뢰가 조성이 되는데 신뢰를 전제로 한 프로세스를 항상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 정부. 외교에서 신뢰라는 것이 외교적 실천의 결과지 외교의 전제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이것은 무슨 노선이나 정책의 문제도 아니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 또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가지고는 과거 정권보다 더 꼭 막힐 것 같은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신뢰, 최소한의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는 신뢰라는 것은 두 가지라고 저는 봐요.

여기 원칙과 로드맵의, 하여튼 그것은 전제라서 말씀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북정책 관련해서 전제돼야 될 것은 어쨌든 기존의 남북 간 정부 간의 합의, 그렇지요? 남북 간 정부 간 합의의 대원칙과 그 약속 이것은 기본적으로 존중이 돼야 남북 정부 간의 진전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출발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점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소장님 말씀은 이 점은 포함돼 있지 않아서 제가 좀 확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기 말씀하신 거지요, 상호 이해 기반한 실리주의가 돼야 된다.

대북정책을 하면 북한의 요구가 뭐고 거기의 이해가 뭐고, 우리가 100% 다 들어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입각해서 뭔가 접점을 찾아야 진도가 나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프로세스를 아무리 구사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드레스덴 선언이나 이런 것들도 오히려 관계 악화만 시킨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맞춤형 인게이지먼트의 로드맵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접근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내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인도주의 분야부터 교육·문화 그다음에 경험으로 단계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주관적일 수 있다……

물론 제가 북한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라는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의 요구나 또 이해관계를 놓고 볼 때 경험의 시기를 이렇게 먼 훗날로 해서 과연 어떤 관계 개선이 가능할까……

아까 5·24조치를 말씀하신 것은 적어도 이런 인도주의적인 분야, 교육·문화 분야 또 일정하게는 경험 분야를 5·24조치를 해제하면서 동시에 일정하게 접근해서…… 물론 정도는 내용적으로 높여갈 수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분야를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조금 더 듣고 싶다는 말씀 드리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3쪽에 보면 비핵화가 여전히 남한 대북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3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존의 포괄적 접근법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맞지 않을뿐더러 신뢰 기반이 구축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와 반대로 이명박 정부 아래에 선 핵폐기만 내세우면서 포괄적 접근법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포괄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인도적 교류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근본 원칙을 포괄한 게 바로 포괄적 접근법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선 핵폐기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관점이 지금 지난 정부로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이 실천적으로 진전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신기욱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맞춤형 인게이지먼트는 사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실행이 잘 안 된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방향 자체는 상당히 맞았다고……

○심상정 위원 그런데 선생님은 왜 실행이 안 된다고 보세요?

○진술인 신기욱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 미

국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중국의 지지도 얻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폐쇄·재개 과정에서 상당히 처리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도 기대를 많이 했었고, 핸들링을 상당히 잘 했고 기반을 잘 만들어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대북정책이 가지 않느냐 하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갑자기 통일대박론이 나와 가지고 저희도 사실 조금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하고 통일대박론하고의 연결고리가 뭐냐 하는 것이 지금도 조금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방향을 잡고 작년까지, 어떤 기반을 만들기까지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올해 들어 와서 통일대박론이 나오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좀 실종된 그런 느낌도 받고 그다음에 이게 조금 실행이 안 된 그러한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드맵이라는 것이 저희가 단계별 했지만, 물론 이것이 기계적으로 첫 번째 단계가 돼야 꼭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로드맵을 상정하고 가야 정책에 좀 일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하다가 좀 막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다른 게 조금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로드맵을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이러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포괄적 접근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 가지고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든가 이러한 식의 방식이 가능하긴 한데, 과연 현 시점에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남북간에 어떤, 서로 잘 믿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거보다는 저희가 제시하는 맞춤형 프로세스를 통해서 단계별로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만약에 포괄적인 접근이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과연 그것이 현실성이 많이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조금, 전체적인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합니다. 라는 그 로드맵은 이게 지금 드레스덴 선언의 기반이 되는 인식 하고 같은 게 아닌가, 아주 단계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진술인 신기욱 그러니까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상정 위원** 그런데 이게 남북관계를 풀어 가는 데서는 너무 단선적이고…… 오히려 포괄적인, 물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합의할 수 있느냐 하는 가능성은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접근하는 전략의 측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허용하는 접근법이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술인 신기욱**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남북관계 개선의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포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건지……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시하는 건 일단 동력을 만들어 놔야 어쨌든 더 큰 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냐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단계별 제시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의 동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신뢰가 빨리 쌓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별 인게이지먼트를 통해서 동력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심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하시겠어요?

○**함진규 위원** 다른 분 하고……

○**위원장 원혜영** 예,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琳 委員** 신기욱 소장님,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하시고 대안을 내 주신 것 같습니다.

공부 많이 했고요.

소장님께서 8월 달에 언론에 기고를 한 게 있습니다. 한데, 거기 보면 ‘신뢰 프로세스, 통일대박론 메울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시가 시급한데 보이지 않는다, 핵 문제 연계도 명확한 선을 긋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시면서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정치적 수사를 넘어서 좀 더 구체적인 남북 프로그램과 이를 실행할 방안이 하루빨리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기고를 하시고 그리고 9월 달에 구체적 의견을 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견을 여쭙고 한 가지는 여쭙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신뢰다, 실리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남측에서 우리끼리 할 때는 온 애기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시한 거 보면, 예를 들면 실리, 시장원리, 글로벌 스탠더드, 국제사회를 통한 협력이지만 압박, 이런 것들이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싫어하는 게 실리입니다. 북측하고 이렇게 회담도 해 보고 하면 미더워야지, 믿음을 주는 것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오는 과정에서 믿음이 쌓여지는 거지 그쪽이 이익이고 내 쪽이 이익이고,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시면서 북한 입장을 고려한 대안 마련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적 프로세스라는 것도 그런 고민 후에 나온 게 아닌지 하는 데 대한 의견을 여쭙고요.

그다음에 8월 12일자, 뵈거든 이거 꼭 한번 여쭙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 더 특별히 언급된 거는 없어요. 5·24조치를 포함한 대북제재에 있어 가지고, 이걸 뭐다 아는 거거든요.

사과 받아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데, 사과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치들은 꼭 북한 입장이 아니고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든 우리가 손해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5·24조치의 해소나 완화가 어렵다면 새로운 조치를 통해서라도 현실적인 남북관계 개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새로운 조치가 예를 들면 어떤 건지, 오늘 여기도 보면 새로운 조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좀 양보하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부소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술인 신기욱**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뢰와 실리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심윤조 위원님 질문과 마찬가지로 대답인데 과연 북한이 남한을 신뢰해서 개성공단을 재개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신뢰는 없더라도 자기한테 실리가 있기 때문에 했다고 보고요.

지금 또 북한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 금강산 재개 아닙니까?

○金光琳 委員 예.

○진술인 신기욱 북한이 지금 남한하고 신뢰가 더 생겨서 하자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그거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초기에 김대중정부 시절에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시작할 때는 민족적 정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했겠지만 이제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실리 기반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는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아마 거기에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金光琳 委員 아니, 북한 자체가 제일 싫어하는 용어가 ‘실리, 시장주의, 글로벌 스탠더드’ 뭐 이런 거거든요.

○진술인 신기욱 그러니까 레토리컬리(rhetorically)는 싫어하지만……

○金光琳 委員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진술인 신기욱 잘 하시겠지만 이야기하고 실행은 꼭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행동을 잘 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실리주의로 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남한보다 더 실리 위주가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金光琳 委員 그런데 밖에서 보면 예컨대 지난 번에 비핵화 3000 이런 것들은 가장 한북판의 가슴을 찌르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할 때 우리 내부의 얘기하고 이제 전부 다 공개가 되고 했을 때 북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정선해서 바꾸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온 게 ‘신뢰적 프로세스’ 이런 말이 아니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진술인 신기욱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金光琳 委員 그리고 ‘새로운 조치를 통해서’라고 할 때 현실적인 새로운 조치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5·24조치……

○진술인 신기욱 그것은 사실 정부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저의 기본 취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는 천안함이라든가 연평도 이런 것 때문에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정부도 바뀌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4조치도 예상했던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24 자체를 우

리가 없앤다 이런 건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되겠지요. 하지만……

○金光琳 委員 그러니까 해소나 완화가 어렵다면 새로운 조치를……

○진술인 신기욱 예, 그렇지요. 어렵다면 새로운 조치를 하나 만드는 거지요, 이번 정부에서.

○金光琳 委員 새로운 조치가 어떤 거예요?

○진술인 신기욱 그것은 이제……

○金光琳 委員 아니, 예를 들면…… 공부하는 차원에서……

○진술인 신기욱 결론론적으로는 해소나 완화에 버금가는 조치를 만드는 거지요, 새로.

제가 알기로는 5·24조치가 국회에서 입법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金光琳 委員 예.

○진술인 신기욱 정부에서 한 거니까 의지만 있으면, 그러니까 제 뜻은 뭔가 하면 5·24조치를 우리가 해소한다고 말을 하면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가 대북정책의 어떤 뭐를 위해서 새로운 조치를 한다, 그런데 아까 심윤조 위원님 말씀마따나 상당 부분은 이미 정부에서 완화된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러시아하고의 3국 협력 같은 것 보면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5·24조치에 위반되는 건데, 제가 통일부장관한테 한번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는 5·24조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장관님 말씀은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金光琳 委員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무슨 대책이나 생각하는 내용이 있는 뭐를 상정한 것은 아니시고, 뭔가 하여튼 내놔야 될 것 아니냐……

○진술인 신기욱 예, 그렇지요. 그거는 아니고 완화나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어렵다 하면 정부가 5·24조치와 다른 새로운 조치를 통해서 결론론적으로는 5·24조치를 완화하는 정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의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구체적으로 뭐를 해라라고, 거기까지는 사실……

○金光琳 委員 생각하신 게 있는 건 아니고?

○진술인 신기욱 예, 그건 아니고 또 저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왜냐하면 그거는 정부가 할 일이지, 저희가 어떤 방향을 제시

를 하는 것이고.

○金光琳 委員 감사합니다.

스트라우브 부사장님께, 전에 부사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미국의 정책에는 일반적인 영속성이 있다’, ‘핵 보유 안 된다’ 그다음에 ‘북핵 프로그램에 군사적 대응 안 한다’ 그리고 ‘북한 체제 변화 시도하지 않는다’ 또 ‘핵 포기 위해 가지고 유화정책 안 한다’ 이게 미국에서 계속 써 온 영속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도 이러한 영속성이 있다 그런데 최근에 대북정책에 변화가 생겼고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이 북한의 의도를 보는 미국 대중과 엘리트의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고 하셨는데, 그다음에 바뀌어 가지고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진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그러니까 이 시점에 있어서 미국 정부가, 미국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북한하고 협상할 고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국 정부 내에 지금 북한을 보고 정책을 조금 바꾼다 하면 더 강경 쪽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金光琳 委員 그 강경의 내용이 어떤 거지요? 예를 들면 이 영속성이 계속 있는 한 핵 포기를 위해서 유화정책도 하지 않는다, 체제 변화 시도하지 않는다, 절대로 군사적 대응 하지 않는다, 그 외에 방법이 있나요?

○진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그러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제4 핵실험 하게 되면 제재를 유엔에서 여러 가지 더 하도록 할 거 같고 그리고 인권 문제, 최근에 와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저런 방향으로 훨씬 더 강경정책으로 나갈 것입니다. 전쟁, 공격이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지만 제재 특히 핵, 미사일, 인권 문제에 대한 제재를 훨씬 더 많이 지지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金光琳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노웅래 위원 신 박사님과 데이비드 부사장께 여쭙겠습니다.

신 박사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남북교류,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관건인데요. 이 비핵화라는 게, 전략적으로 현실적으로 비핵화라는 게 동결을, 우리가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 전략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비핵화라는 걸 핵의 동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걸 완전히 한반도에서의 제거로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진술인 신기욱 궁극적인 비핵화는 제거로 봐야 되겠지요, 동결은 비핵화는 아니니까.

○노웅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지금 핵을 완전히 한반도에서 제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남북관계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경색관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사일, 핵개발이 더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남북관계 경색이 고착화되고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 신기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투 트랙으로 움직이는 거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 하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임 정부에서 그러한 결과가 된 건데, 그래서 아까 칼럼도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그러면 비핵화 전제조건 없이 갈 수 있는 남북교류의 선이 어디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공감할 하고 남쪽에서 컴퍼터블(comfortable)하게 느낄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하고 거기까지는 과감하게 지원을 하자는 거지요, 제 생각은. 그렇게 해 가지고 남북관계의 동력을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어서 비핵화 문제를 가야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모든 것을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삼으면 말씀하신 대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계속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전제가 지금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맞춤형 인게이지먼트를 통해서, 같은 얘기지만 공간을 만들고 동력을 만들어서 결과론적으로는 비핵화로 가야지 모든 것을 비핵화 전제조건을 걸어 놓으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지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노웅래 위원 신 박사님이 보시기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선이라는 건 어디까지라

고 보세요?

○**진술인 신기욱** 제가 볼 때는 인도주의 지원이라든가 아까 교육, 문화 이런 쪽은 제가 볼 때 상당 부분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주의 지원도 분명히 박근혜정부가 비핵화 없이 하겠다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작거든요.

○**노웅래 위원**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진술인 신기욱**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정도로 한번 과감하게 해 보자는 거지요. 왜냐하면 영역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통일한국을 바라보면 결국은 우리 한반도, 한국인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로 한번 저희가, 이러한 표현이 좀 뭐하지만 눈 딱 감고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핵과 연계시키지 않는 선이 어디인지를 정한 다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과감하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노웅래 위원** 눈 딱 감고 해 보자고 말씀하시는 건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신뢰프로세스를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랑 같은 맥락입니까?

○**진술인 신기욱** 제가 올 초엔가 연합뉴스 위싱턴 특파원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보자, 굉장히 좋은 방향이고 좋은 정책인데 너무 수동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자, 본격 가동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데이비드 부사장께서도 대답을 해 주시고요.

한반도의 비핵화를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이걸 원칙으로, 전제로 하다 보니까 한 말자국도 남북관계가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진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우리 보고서에서 쓴 것처럼 핵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도 남북관계가 미국 사람, 국제사회가 봐도 좀 특별한 관계에 있고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 단계에 와서 북한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기 싫은 건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특수관계가 있어서 북한하고 여러 가지 해도 괜찮은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량 문제, 보건 문제, 여러 가지 사회 접촉, 이런 여러 가지는 해도 핵문제와 별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주 적극적으로 그 여러 가지 해가지고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그러면 나중에 경제협력도 더 가능해지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진다면 6자회담도 재개되고 거기서 경제협력 문제, 인프라 문제 갖고 구체적으로 북한하고 협상할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모든 것을 비핵화에다 두지 말고 핵문제와 별관계없는 것 아주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노웅래 위원**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보유가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갖고 있어도 되고 안 갖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자기네 체제 유지나 자기네 생존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협정으로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을 놓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는데 만약에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인다면 북한이 핵보유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신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진술인 신기욱** 사실 저희가 이런 제안을 하지만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 이게 어려운 문제고, 이게 쉬운 문제 같으면 벌써 해결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고서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게 들릴지 모르지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핵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아마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전문가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보면 이게 생존의 문제면 역으로 앞으로 어떤 생존에 대한 걱정을 안 하면, 그러니까 핵을 만약에 포기한다면 그것은 북한이 생존에 대한 걱정을 안 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생존에 대한 어떤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의 좀 어떤 약간 희망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맞춤형 인게이지를 통해서 북한이 생존에 어떠한 걱정을 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면 비핵화 문제도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

한 상황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 저희의 취지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절대 포기는 안 하겠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노웅래 위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주도를 해서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술인 신기욱 이미 미국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군사동맹이지요.

○노웅래 위원 그렇지요?

○진술인 신기욱 3각 동맹은 아니지만……

○노웅래 위원 한·미·일을 3각 동맹으로 지금 묶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미국이 움직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요?

○진술인 신기욱 글썽요, 데이비드 선생님도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미 한미, 미·일 동맹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일 간의 군사동맹은 아니지만 한·미·일 3각 공조는 많이 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한·미·일 3각 군사동맹으로 간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설명을 좀 하시지요.

○진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물론 미국 정부로서 동맹인 한국과 동맹인 일본이 특히 북한 문제를 놓고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미국을 통해서 더 협조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특히 지금 요즘에 와서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노웅래 위원 만약에 직접적인 3각 동맹이 된다 그런다면 이것은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 개선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게 작용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진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노웅래 위원 북한이랑 중국을 자극할 거고요, 거기에 위협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진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하는지, 공개적으로 그 정책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아주 많이 큰 요소인데, 그런데 북한이 앞으로 공격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과 미국이 먼저 대응해야 되지만 미국이 대응하려고 하면 일본의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사일 문제 같은 것을 놓고 일본, 대한민국, 미국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 더 커지는 겁니

다.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좀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웅래 위원 그 의견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혜영 노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중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柳在仲 委員 준비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부르시니까……

신기욱 교수님 또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아주 고맙습니다. 이렇게 맞춤형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좋은 정책을 가지고 남북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참 꼭 막힌 이 남북관계 교류에 대해서 합의점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내용을 보고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로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북한 정세에 노크를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5·24 대북 제재조치에 대해서 완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풀고 좀 해야 된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 지지도 얻어야 된다는데 과연 지금 시점에서는 국민적 공감 지지를, 이것 해제해야 된다는 지지를 얻고 있다고 봅니까, 밖에서 봤을 때? 지금 그 질문에 답, 해제해 줘야 된다는, 완화해 줘야 된다는?

○진술인 신기욱 글썽요, 그것은 저보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웃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심윤조 위원 말씀대로 이미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이미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단지 정부에서 그냥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것뿐인 측면도 있고, 뭐 이게 언론을 통해서 보면 여당이나 야당 위원들께서도 완화하자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나서 가지고 ‘우리는 5·24조치를 이제 완화한다’ 발표를 하면 정치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아마 지금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칼럼에 제

시한 것이 그게 어렵다면 정부가 좀 뭔가 새로운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5·24조치를 무력화시킨다라고 그러면 발언이 썰지 모르지만 그것을 좀 대체한다 그럴까 이러한 식의 어떤 조치를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다시 말하면 정부가 ‘우리는 이제 5·24조치는 실효가 없기 때문에 그만둡니다’ 하면 정치적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지 말고 대신에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겠다라든가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가면 결국 결과는 같지만 정치적인 부담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구요.

그러면 과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은 사실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요. 저희는 사실 연구, 제가 한 가지 농담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아, 나는 학자인 것이 참 다행이다’, 왜냐하면 저는 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 계신 분들은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역할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고, 하지만 저희가 정책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실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역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방향 제시를 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뭘 답아야 하는 것은 또 다른 연구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柳在仲 委員**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도 말과 우리 행동, 생각은 잘 하는데 말도 이렇게 던질 수 있는데 행동에 옮기기가 참 쉽지를 않아요. 행동으로 옮기면 참 이 정치가 완전 달라질 건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도 그런 입장이고 한데, 정부 정책으로서도 통일 정책이라든지 아주 전향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 경제교류는 아니더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교류, 교육·문화 또 보건 이런 것도 있고 또 종교적인 활동도 민간교류가 있다 하면, 그것이 독일 통일의 예를 봤을 때도 종교적으로 동·서독의 어떤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통일을 당겨 온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내부 핵, 이 핵으로 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도 북한이 미국이나 남한을 상대로 핵을 사용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화하는 수단으로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계산적으로 가다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통일은 요원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신기욱** 통일은 사실 한국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당위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柳在仲 委員** 우리 쪽 생각이고……

○**진술인 신기욱** 그리고 결국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국이 상당히 강대국이라는 하지만 어떤 분단비용도 많고,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되고 또 대통령 말씀대로 통일을 했을 경우에는 대박통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견이 없겠지만,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것이고 또 어떻게 가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 문제가 궁극적으로 중요하기는 하지만 현실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그것을 현재의 목표로 놓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것보다는 통일기반 조성을 만드는 것이 현재에서는 더 중요한 정책의 어떤 요소가 되는 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통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또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예측한 것보다 상당히 훨씬 빨리 온 경우도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柳在仲 委員**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유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위원**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특히 신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너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남북관계에 북핵 문제가 놓여 있고 또 지금 남북관계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남북관계가 늘 그랬던 것은 아니고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 그 10년 동안은 아주 활발했거든요. 북핵 문제도 6자회담을 통해서 해법을 모색했고요, 또 합의도 해서 일부 실천도 되었었지요.

그런데 이명박정부 들어서 비핵·개방·3000 이런 정책으로 가면서 남북관계가 파탄 나고 또 북핵 문제도 더 악화가 된 거지요. 그리고 박근혜정부 들어서서도 5·24조치를 계속 이렇게 답습하는 바람에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서서도 남북관계에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 남북관계의 목표는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활발했던 그 시절의 상황으로 하루빨리 되돌아가서 거기에서 그것을 출발선으로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정부가 조금 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박근혜정부는 가능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수층의 아주 굳건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정부가 훨씬 더 과감한 그런 대북 드라이브를 걸어도 충분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정말 아쉽고요.

그러면 어떤 과감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5·24조치 그것 해제해야 되고요. 그것이 우선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역대 정부에서 이 남북 정상 간의 합의들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7·4공동성명, 노태우정부 때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 6·15공동선언 또 노무현 대통령의 10·4정상선언, 이런 역대 정부가 했던 정상 간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상호 이행한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데부터 남북관계를 새롭게 풀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북핵 문제도 6자회담을 시급하게 재개해서, 말하자면 그런 다자외교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죽 경험해 보면 이 남북관계의 어떤 발전에서 가장 진도를 효율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정상회담이거든요.

지금 박근혜정부 2년차가 다 저물어 가는데 내년 정도 중에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면 저는 박근혜정부에서도 이렇게 남북관계 별로 진전시키지 못한 채 끝나리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북정상회담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들어가는 것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과감하게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하시지요.

○진술인 신기욱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맞는 방향인데 비핵화랑 연계하지 않는 선이 있으면, 거기까지는 과감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문재인 위원님이,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는 한데요, 과감하게 말씀하시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활발했던 대북관계가 왜 MB정부에 들어와서 단절됐느냐, 그러면 그것이 전적으로 MB정부만의 문제냐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면 과연 합의한 것들이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느냐 또 지속 가능한 합의를 했느냐 하는 문제도 제가 볼 때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과연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정상회담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인한 것이 과연 맞았느냐, 제가 그 당시에 칼럼을 쓴 적이 있었는데 한국 일간지에, 저는 사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반대한 것이 아니고 임기 말에 가서 많은 것을 사인했을 경우에 만약에 다음 정부가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러면 오히려 남북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다…… 정상회담 직전에, 아마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가 칼럼을 쓴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클린턴 대통령 말기에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 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LA타임즈에서 저보고 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아규(argue)할 수 있는 칼럼을 쓸 수 있느냐 했는데 제가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임기 말에 가 가지고 약속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것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제가 그런 취지로 미국에서도 반대를 했었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가시는 것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은 100% 찬성이지만 임기 말에 가서 약속한 것이 차기 정부에 이행이 못 됐을 경우에는 아마 오히려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하는 생각을……

○문재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여

정부 시절에 가장 아쉬웠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것이거든요.

○진술인 신기욱 그렇지요. 1년만 빨리 했으면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위원 그래서 그 정말 참 좋은 합의들을 많이 했는데……

○진술인 신기욱 맞습니다.

○문재인 위원 그 좋은 합의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채 이 정권이 교체가 됐고 그다음에 MB정부는 그것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었고요.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우선은 박근혜정부도 너무 늦기 전에 적어도 3년차가 되는 내년 정도에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진술인 신기욱 예,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문재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좋은 합의들을 하고 나서도 정권이 바뀌고 나면 또 그것이 말하자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무시되고 이러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계속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는 참여정부 때도 10·4정상선언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유엔총회에서까지도 지지 결의가 있었는데 우리 국회에서 일종의 비준 같은 절차를 밟아 주지 않은 것이 저는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렇게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몇 년이 이어나가는 그런 통일 정책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은 아마 공감하시리라 보고 봅니다만.

○진술인 신기욱 그래서 제가 국민 공감대 형성도 강조를 드리고 제가 여기 부제도 ‘지속가능한’ 그런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합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민의 한 3분의 2 이상 정도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문재인 위원 하나만 더 하면,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에서 왜 이렇게 남북 관계가 과거의 그 진도를 다 까먹고 오히려 이렇게 파탄이 나게끔 됐느냐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 아까 좀 언급이 있었는데 역시 북한 붕괴론 그런 것에 이 통일 정책이나 남북 정책이 많이 입각해

있었던 것 아니냐, 그 배경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북한 붕괴라는 게 아까 우리 신 박사님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만약에 북한 정권이 붕괴가 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더라도 오히려 중국에 SOS를 치게 되면 친중국 정권이 들어서거나 또는 중국이 후견하는 그런 정권이 들어서서 오히려 우리가 통일의 길은 더 멀어지고 할 가능성이 다분한데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 북한 붕괴론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보수정권의 아주 과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신기욱 제가 MB정부나 지금 정부가 북한 붕괴론에 근거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한 소스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지난 정부에는 좀 그러한 느낌이 있었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도 100% 동감합니다. 만약에 김정은 체제가 오늘 무너졌을 경우에 내일 한반도가 통일이 되겠냐,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점에 있어서는 독일하고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일의 경우에는 고르바초프가 더 이상 지지를 안 한다 그러니까 동독이 무너지고 통일이 됐는데 한반도는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북한에 붕괴 조짐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어떤 희망적인 정책을 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윌리엄 페리가 말한 대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고 정책을 펴는 것이 맞는 현실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혜영 문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반갑습니다.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발표하신 그 제안서를 대강 스킴(skim)만 했습니다. 저는 대북 정책, 신기욱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3분의 2 정도의 최소한도 동의는 담보가 돼야 된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과거 정부를 보면 국민적 동의가 담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이 됐던 거고 또 국민적 공감대도 따라주지 못했고 또 정권이 바뀌면 수시로 대북 정책에 관한 것, 특히 경제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자꾸 이렇게 변화를 주는 그런 모습을 되풀이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정권은 바뀌더라도, 세계 220여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지금 분단이 돼 있는 상황인데 정권을 초월해서 국민의 3분의 2,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그런 어떤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 사회에서도 동의하는, 대략적으로라도 동의하는 그런 통일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해오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요새 중국 학자들, 중국의 학자들하고 우리 학자들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통 또 정부직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하고 있고 상당한……

○진술인 신기욱 관변 학자들이 많습니다.

○함진규 위원 그렇지요. 영향력을 또 행사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민대 무슨 연구소인데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중국 학자들이, 물론 정부직도 검하고 있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중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공공연한 논평 내지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어떤 대외적 발표는 아니라 하더라도 학술적으로 나온 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직을 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런 발표를 통해서 관계되시는 학자로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계신지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인권 관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마 우리 정부도 인권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미국하고 일본은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미국 일본이 2004년인가 5년하고 또 2007년도에 순차적으로 인권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권법을 통과를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당사국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5·24조치 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상황이 북한이 연간 총 예산이 약 한 6조 6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중에서 무려 1조 원가량, 약 1조 원 이상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남북 관계에서 향후 통일을 지향하면서 더욱더 굉장히 왜곡된, 북한이 과연 남한을 위시해서 또 주변 미국이나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인지,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북한을 선공격한다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방비로 조 단위, 이게 사실 퍼센티지로 따지면 6조 6000억에서 1조 원 이상이면 거의 한 16% 한 17% 이 정도 되는, 거의 20% 가까이 육박하는 그런 군사비용인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없고.

또 특히 핵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핵 공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남의 나라 상황인 것만냥 생각을 하고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소련을 위시해서,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주변국들이 많이 분열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혼란 상태가 왔을 때 북한도 예외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혼란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이런 소형의 무기든 아니면 대형의 무기든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 우방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위험성을 너무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끝으로 5·24조치는 저는 비경제적 분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가 됐든 향후 통일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을 조금 얘기하시는데 저도 중국을 자주 다녀봅니다만 북한이 붕괴가 되더라도 아마 중국이 그렇게 자기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국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냥 중국 중심으로 북한이 재편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 학자들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한반도 문

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제 조치는 향후 통일을 대비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5·24조치 해제 못지않게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신기욱 중국 학자들 발언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 한국 언론에서는 그런 중국 학자들의 발언을 많이 받아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겹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소위 그런 관변 학자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의 정책은 당에서 하는 것인데 큰 영향력이 없고 어떤 경우에는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하고 좀 다르기도 한데 그러면 왜 중국 정부에서, 당에서 놔두냐.

그런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중국도 과거의 중국이 아니고 이제 G2라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중국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중국도 국제 사회에서 지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도 조금 어느 정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제재 같은 것을 하면 만약에 중국이 내놓고 반대를 하면 소위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어떤 여론이 안 좋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관변 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놔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국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러한 이미지를 국제 사회에 주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의 입장이 중국의 핵심적인 의견이라든가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물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의 언론은 주로 이런 사람들의 발언을 받아 가지고 자꾸 쓰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동의하지 않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중국의 대북정책은 아직은 바뀌지 않았다.

물론 중국의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기분 좀 나쁘고 이렇긴 하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는 아직도 여전하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는 것이 입장이고.

그다음에 지금 일본하고 과거사 문제로 굉장히 갈등이 심한데 제가 볼 때는 중국하고의 역사 문제도 저는 잠복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북공정이라는 것도 사실 중국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시도를 한 것이고 이제 외교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일단 덮어는 뒀는데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그 동북공정 문제도 불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중국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톱한 것이 아니고.

동북공정을 보면 고구려가, 저희는 한국 역사로 분명히 배우고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동북공정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갈등이 생길 소지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자기 걸로 끌어가는 것은 쉽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북한이 붕괴됐다고 해 가지고 내일 한반도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어떠한 과정이 상당히 험난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진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우리도 우리 보고서에서 인권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회에서 인권법이 통과돼야 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뒤야 되는지는 언급은 안 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보고서에서 쓴 것처럼 대한민국으로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반도 문제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35년 전부터인데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관심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거 한 30, 40년간 국제사회가 인권이라는 것을 아주 깊게 연구하게 됐고 이제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옛날 제가 외교관 시작했을 때는 내정간섭이라는 것을 자꾸 들었는데 요즘 인권문제에 있어서 내정간섭이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태도가 특히 소련이 붕괴한 다음에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T 혁명, 제가 국무부 떠났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공부

하고 연구할 수 있을지 걱정됐는데 국무부에 들어갔을 때 들어갈 때마다 컴퓨터 켜면 정보가 막 흘러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은퇴해 가지고, 지금 제 스탠퍼드대학교 인터넷 화면을 보면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IT 혁명 가지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북한 인권문제를 연구하고 있고 서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현상은 더 뚜렷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절대, 물론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게 되면 북한은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유한 것은, 대체로 대한민국이 북한 문제를 놓고 국제사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은 아주 가만히 연구를 많이 하고 옆에서 관심 있는 나라가 도와주지만 대한민국 자체로 아주 적극적으로 인권, 인권이라고 하면 그것을 북한이 핑계로 삼아서 대한민국하고 접촉을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보고서에서 한 2, 3페이지로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우선 한두 가지 먼저 궁금한 것을 묻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은 아직도 과거 약속의 합의 파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현 수준에서의 동결, 즉 고도화만 시키지 않으면 6자회담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지금 미국 정부는 6자회담을 재개해도 북한이 진심으로 협상을 안 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자회담을 재개하려고 하면 북한이 어떻게 해서든지…… 협상하게 되면 진짜 핵 문제, 핵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협상하겠다는 그런 것이 북한으로부터 서야 된다, 지금 미국 내에서 북한을 믿는 사람 아마 거의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미국 정부가 무조건 6자회담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박병석 위원 자, 바로 이제 여기서 우리하고 입장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언제까지나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6자회담도 하지 않고 전략적 인내란

이름으로 방치할 것인가?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북한은 유엔의 제재—5·24조치—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의 고도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언제까지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전략적 인내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진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그러니까 아마 미국 정부는 북한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별 협상할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핵은 미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미국으로서 6자회담에 가서,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지금 분명히 전략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냥 미국이 6자회담에 들어가서 협상을 하게 되면 핵을 없애는 데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지금 미국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박병석 위원 대화조차 하지 않고 다른 특별한 제재 수단도 없이 ‘당신들이 변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이 순간에도 핵무기는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그러한 입장만을 취하는 것이 과연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진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

○박병석 위원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가 전세계 전략의 하나, 아시아 정책의 하나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으로서는 북한의 핵문제는 우리 남북한 8000만 민족의 운명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확실히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진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같지 않다, 모든 나라는 자기 입장도 있고 보는 시각이 있고 정책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책보고에서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 같으니까 또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발전될지도 모르니까 이제 적어도 대한민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박병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자회담 당사국들의 입장을

보면 중국과 북한은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면서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미국과 대한민국은 전제조건이 있는 겁니다. 동결하고 얘기하자는 것 아니에요? 보장하고 얘기하자.

여기에 관해서 미국은 한국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까?

○진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무조건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것은, 이게 말장난인데 무조건 아니에요. 북한은 조건을 만들었어요. 북한은 핵 세 번이나 실험했고 앞으로 도 아마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것은……

○박병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또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봉쇄 조치를 확실하게 해서 북한이 건널 수 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북한을 끌어내서 대화로 하지 않는 한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개발하고 있어요. 미국은 그것이 한반도의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으로서는 우리 민족의 문제입니다. 남북한의 문제입니다. 우리 장래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5·24조치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유엔을 통해서 우리가 5·24조치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북한이 경제적으로 손을 들어야 되는데, 5·24조치 이전에 대북 무역액 중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60%대였는데 작년에 89%로 올라왔어요. 즉, 앞문은 걸어 잠갔지만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북한에 실질적인, 약간의 영향은 주지만 결정적 타격을 못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런 단순한 교역뿐만 아니라 지하자원, SOC, 90% 이상 가져갔어요.

또 하나, 경제의 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폐의 통합이지요? 그런데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는 물론 경제특구에서는 공식적으로 중국의 위안화와 북한의 인민폐가 공식 화폐로 쓰입니다. 경제통합의 일종의 초기 단계가 진행된 것이지요.

심지어는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에 보면,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우리 북한을 경제적으로 중국의 동북 4성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5·24조치로, 미국의 전략적 인내 조치로 북한을 옥죄는 성과가 있습니까? 핵 개발 억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

겠어요?

○진술인 신기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저희 문제 인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요 논지를 보면 전략적 인내 정책은 한국에 유리하지 않고, 한반도 상황이 좀 더 악화되고,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은 변화의 의지나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시급하다, 그러니까 한국이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공간을 만들고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아규(argument)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취지입니다.

○박병석 위원 그 점에서, 원칙론에 입각한 건데 저는 적어도 학계에서는 좀 더 과감한 게 나올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5·24조치는 ‘선택적 해제’라는 표현을 쓰셨지요? 그거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그렇다 그런 해석을 아까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전면적 해제’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5·24조치 해제할 테니 이산가족 전면적 재회를 하자’ 그런 명분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우회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바는 미국과 일본의 해양세력과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잇는 대륙세력이 한반도에서 또다시 각축전을 벌이게 되는 상황이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피해는 한반도가 보는 것 아니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스스로…… 필요하면 미국 설득해야지요. 남북관계 개선해야지요. 그러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 또다시 대한민국의 운명을, 한반도의 운명을 강대국에 맡길 가능성이 있다, 정신 차려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신기욱 그 취지는 저희가 100%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저희 학자들이 보통 이런 거를 하면 항상 받는 지적이 뭐가 하면 ‘다 좋은 얘기인데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그러한 지적을 많이 받아서 사실 저희가 이거를……

오늘 위원님들 중에서는 조금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더 과감하게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아까 문제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저희가 그러한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려면 가능하면 고민을 하면서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 싶었고, 이 정도 수준이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 3분의 2 정도는 공감하지 않겠느냐 그

런 거를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또 안 그러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하면 다 좋은데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박근혜정부 초기에 남북 문제, 우리의 운명을 주도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 초기에 남북한을 비롯한 주변 4대 강국이 모두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북한도 김정은으로 바뀌었고, 오바마 2기를 맞았고, 아베 정권이 들어섰고, 푸틴이 다시 들어섰고, 시진핑으로 바뀐 이때가 대한민국이 외교적 활로를 통해서 남북 문제를 개척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다면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그 황금시기를 놓쳤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시간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다. 왜?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계속 고도화시키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대한민국의 입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약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필요하다면 미국도 설득하고 대화하고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중국의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중국관계를 오래 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언론보도는 너무 선정적이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근본적인 변화냐, 진술적인 변화냐, 전략적 변화냐에 관해서는 다시 판단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신기욱 저랑 의견이 똑같으시네요.

○위원장 원혜영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새우가 아닌 돌고래로서의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오늘 맞춤형 인게이지먼트의 여러 가지 단계적 접근 그리고 거기에 한국적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 다 좋다고 저

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마는 현실적으로 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해서는 대체로 국민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냥 요란한 빈 수레 같다, 먹을 것 없는 잔치 같다’ 이런 평들이 넘쳐 나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이 말씀들처럼 사실은 이제 남은 시기가 올해 후반기와 내년, 그러니까 미국도 선거가 없고 우리도 선거가 없는 이 시기에 과연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일구어 낼 수 있겠느냐가 달려 있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닉슨 대통령의 대중관계 개선의 사례를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선 하나 짧게 여쭙 보고 싶은데요, 아까 발제하시면서 신 소장님께서 미처 말씀 못 하신 것 같은데 DJ정부의 햇볕정책과 지금 말씀하신 맞춤형 인게이지먼트의 가장 결정적인, 핵심적인 차이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술인 신기욱 그러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DJ정부 때는 아마 정치·외교·안보 사항하고 경제 쪽은 분리를 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해서 투트랙(Two-Track)으로 움직였는데 그다음에 반대로 MB 때는 두 개를 링크시킨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둘 다 맞지 않다, 외교·안보상황에 맞게 인게이지(engage)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지요.

○박홍근 위원 그런 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아까 정리가 되어 있던데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제가 중국에 의원들과 함께 가서 중국의 당 간부들이라든가 외교부 사람들도 만나고 왔는데 현 정부의 ‘통일대박론’에 대해서 ‘정말 느닷없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것은 결국 북한의 위협을 가중시키고 소위 흡수통일론이지요. 그래서 남북 간에 긴장을 더 고조시킬 것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한 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통일대박론이라는 것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상대방이 있는 것인데 지금 남한정부에서만 요란하게 이 얘기를 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 성과는 아무 것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하고 통일대박론에 있어서의 어떤 논리적 연결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쓰셨어요. 그 지점을 좀 더 풀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신기욱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에 비판적이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작년까지는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진핑…… 중국이라든가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서 정책을 리뷰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바마라든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설명도 하고 지지를 받고 이러한 일종의 그라운드워크(groundwork)를 한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폐쇄·재개 과정 동안 견제를 굉장히 잘했고, 작년까지는 저는 상당히 후하게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어서 조금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했고 통일대박론이 나왔는데…… 그래서 통일대박론은 제가 볼 때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약간 당위론에 가까운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통일대박론으로 간 그 과정이 뭔지 그게 사실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도 조금 연결고리가 약하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홍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북정책 수립에 있어서 몇 가지 고려 지점들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북핵 문제 해결 관련해 가지고 아까 데이비드 부소장께서는 ‘미국은 핵과 별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는 남한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교육·문화 교류협력이라든가, 나아가서 경제협력 이렇게 나아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는 이런 대북 인도적 지원까지도 결국 퍼주기이고 그래서 결국은 핵무기라든가 여러 가지 무기 생산에, 개발에 자금을 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그러니까 식량…… 인도적 지원은 여러 가지 조심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핵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근본

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 인민들한테 식량 원조와…… 북은 돈 많이 준다면 그만큼 북한 정권이 알아서 다른 데다 돈 쓸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보통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쇼티지(shortage)가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원한다면 저런 지원을 핵과 별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미국 정부도 어느 정도 그것을 남북 특수관계로 이해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홍근 위원 부소장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 보겠습니다.

오늘 인권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언급을 하고 또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인류 보편의 가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 원칙, 이렇게 또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처럼 지금의 정전상태인,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이 그렇게 북한의 인권을 많이 언급을 한다면, 그다음에 여전히 북한은 미국을 적대적인 관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또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또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 사실은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아까 동의하시는 말씀으로 설명을 해 주신 거지요, 부소장님?

○진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저도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특히 일본보다 다른 나라들이 북한 인권 문제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구라파 나라 중에 관심 많이 있는 나라들이 많고 사실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공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 소장님께 하나 여쭙 보겠습니다.

혹시 ‘코리안 포물러’에 대해서 얘기 들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가 한·미·중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일본까지 포함해 가지고 북핵 해결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8월에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TV에 나와서요, ‘코리안 포물러를 만들어서 긴밀히 협의해 가고 있다, 북한을 제외

하고'. 그런데 북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이 사실 테이블이 잘 만들어질지도 우려스럽습니다마는 당사자인 북한을 제외하고 이것이 추진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혹시 신 소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진술인 신기욱 제가 그거는 사실 못 들었는데……

○박홍근 위원 아직은 아마 공개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정부의 구상이 과연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한번 여쭙 봤던 것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쭙 보겠습니다.

페리 프로세스, 오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 이상으로 사실은 '레드 콤플렉스'가 심하고 그래서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떤 이념적 갈등 또는 세대적 갈등 이런 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경받고 전문성과 책임감이 있는 인물로 정치를 전담토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근에 통일준비위원회 산하의 국제특보단에서는 헨리 키신저를 영입하겠다는 이런 언론의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자들이 다시 재확인하고 하니까 정부는 부인을 하는 이런 약간의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있었는데, 결국은 과연 그런 임무를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 이런 갈등을 고려했을 때 과연 가능할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미 아시는 것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일준비위원회만 해도 조금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일부도 지금은 독점적으로 사실은 대북관계를 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된다면 현실적으로 전문성과 중립성과 신망을 가진 그런 어떤 인사를 대북정책의 어떤 총괄적 책임자로서, 컨트롤타워로서 과연 세울 수가 있을까, 이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신기욱 저희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최선의 인물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쉽지는 않겠지요.

○박홍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혜영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지요.

심윤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심윤조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심윤조 위원 신기욱 소장님 또 스트라우브 부소장님, 3시간 넘게 고생 많으십니다. 미국의 히어링하고 많이 다르지요? 그래서 고생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스트라우브 부소장님께 물어볼게요.

최근 일본이 북한하고 소위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에 있는 모든 일본인의 문제를 다룬다고…… 그런 명목으로 접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최근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레버리지로 쓸 수도 있고 또는 미국이 과연 북핵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도 있어서 일본이 스스로 북한의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한 방편에서 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한편으로 북한은 한국하고…… 여기 보고서에 나왔지만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국하고 해 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고 또 중국도 최근 원유 도입을 끊었네마네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북한과 중국 관계가 가깝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둘 다 탈출구를 모색하다 보니까 일본과 북한이 그렇게 접근하는 양상을 띠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질문은 이러한 일본과 북한의 접근에 대한 미국의 입장 그리고 이러한 일·북 접근이 남북관계 개선, 한국 주도의 남북관계 개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대북관계 개선 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여러 가지 미국 관리들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동안 일본이 북한하고 협상한 것을 보고 불투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볼 때는 일본이 불투명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다.

또 반면에 미국 관리들은, 미국 지도자들은 일본이 끌려간 사람을 풀려고 하는 것은 100% 이해를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마 미국정부에서도 확실히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 협상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 아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심윤조 위원** 미국 정부 입장 말고 스트라우브 부소장님의 견해.

○**진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제 개인적인 의견……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절대적으로 납치된 대부분의 사람들을 석방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베 정권은 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아베 정권도 다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협상을 했다면 왜 그렇게 하는지는 궁금합니다.

다만 그저께 신문 보도를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도…… 아베 총리도 공개적으로 ‘다 풀리지 않으면 이 협상은 끝난다’ 아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심윤조 위원** 두 번째 질문, 남북 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진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그것도 아직까지는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따라서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인질을 다 석방시키고 일본에 보내도록 하고, 그리고 일본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여러 가지 혜택을 양보해 준다면 그것은 좋지는 않을 것이지요. 미국의 입장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고, 아마 남북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혜영** 심윤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부소장님 그리고 우리 신 교수님, 오랫동안 아주 성의 있는 답변 해 주셨는데요. 존경하는 심윤조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북한의 일본하고의 관계 개선, 북한의 미국하고의 관계 개선이 남북한 관계 개선에 득이 됩니까, 실이 됩니까?

○**진술인 신기욱**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형태에 따

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스(yes)’ ‘노우(no)’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관계 정상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병석 위원** 관계가 완전 정상화되는 수도 있고 상당한, 국교 정상화까지 가지는 않지만 인적 왕래라든가 물적 왕래에 대한 더 넓은 왕래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냐, 오히려 도움이 안 되냐 그런 말씀이지요. 해가 되느냐……

○**진술인 신기욱** 저는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스(yes)’ ‘노우(no)’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도 아마 미국이나 일본하고의 관계 개선을 상당히 전략적인 카드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요.

예를 들면 너무 중국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카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로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leverage)로 쓸 수도 있고, 그러한 전략적인 카드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 개선은 아마 전체적으로 또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병석 위원** 우리 데이비드 부소장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진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두 나라 간의 관계가 나아지면 그것은 또 나라 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 북한하고 협상 결과 무슨 합의를 하는지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일본 관계가 나아졌으면 하는데……

○**박병석 위원** 최근에 미국의 장관이 두 번에 걸쳐서 ‘아베 총리의 북한 방문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보도에 나왔지요?

○**진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예.

○**박병석 위원** 기본적으로 남북, 지금까지의 입장은 뭐였느냐? ‘북한이 고립되지 말고 국제사회로 나와서 국제규범에 따라라’ 하는 것이 우리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견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미국은 일본에 경고를 하느냐? ‘아베, 가지 마라’ 그것은 적어도 미·일 간의 공조, 한·미·일의 공조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진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아마 미국 정부가 아베 정부의 대북정책 의도를 조금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위원 의심이라는 게 어떤 방면에서 의심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진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혹시 국내 문제를 갖고 너무 적극적으로 북한한테 너무 많은 양보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위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미국하고의 안보, 군사, 가장 돈독한 우방이지요. 또 앞으로 미국이 그런 돈독한 관계가 계속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미국이 좀 더 한국의 입장을 감안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것은 세계전략의 일환, 아시아전략의 일환이지만 대한민국 남북한으로서는 우리의 운명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미국이 더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혜영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발표해 주신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신기욱 소장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부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은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귀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및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가을 회기 중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방문을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개최될 아시안게임의 남북경기를 관람하거나 또는 북한선수단을 격려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중·러·일 6자회담에 참석하는 나

라들의 한국 주한대사들을 초청해서 가벼운 간담회를 하는 계획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김 광 립	노 웅 래	문 재 인	박 병 석
박 홍 근	심 상 정	심 윤 조	안 덕 수
양 창 영	원 혜 영	유 재 중	이 목 희
정 병 국	함 진 규	홍 영 표	

○위원 아닌 출석 의원(7인)

강 동 원	김 기 식	김 성 곤	김 영 환
심 재 권	유 인 태	임 내 현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문 위 원	이 종 후
전 문 위 원	배 용 근

○출석 진술인

신기욱(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소장)
데이비드 스트라우브(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부소장)